

주부 55% “정책으로 후보선택”

“여성이라고 무조건 지지 안될말” 43%

리서치연구소, 지방의원선거 설문조사

지자체 선거에서 ‘정책 우선으로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주부가 55.3%나 되고, 44.3%는 ‘여당보다는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이라는 점이 특별한 지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부가 43.3%이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10.3%나 돼 여성 후보에 대한 주부들의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리서치 앤 리서치 연구소가 지난달 15~22일 전국의 20~50대 주부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주부의견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있다’가 42.6%로 ‘관심없다’ 31.1%보다 다소 높았다. 이를 학력별로 나눠보면

대졸 이상이 61.5%, 고졸 45%, 중졸 이하 34.3%로 학력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돼야 할 사람으로는 44.4%가 야당추천후보를 꼽았고, 여당추천후보와 무소속후보는 각각 27%, 23.2%였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여당추천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야당추천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부산·경남지역에선 여당추천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비율이 높고,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야당추천후보가 돼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원의 출신배경은 정치인, 학계·교육계 인사, 언론인, 경제인, 행정관료,

노동·재야운동권 인사 등의 차례로 꼽았다.

“금품제공자 뽑지말자” 여성유권자연맹 기준제시

여성유권자연맹(회장 신낙균)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람을 뽑자’ ‘이런 사람을 뽑지말자’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사람을 뽑자’는 기준은 근검·절약하는 사람, 재산공개할 수 있는 사람, 부정·부패 전력 없는 사람,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 남녀평등의식이 있는 사람, 소외계층 문제와 환경오염에 관심 있는 사람을 들었다.

‘이런 사람은 뽑지 말자’에선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사람, 감언이설적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 등을 제시했다.